

II. 언 론

1. 일제의 언론정책
2. 무단통치기의 언론
3. 문화정치기의 언론
4. 1930년대의 언론

II. 언 론

1. 일제의 언론정책

1) 법적 규제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의 일관된 언론정책은 철저한 강압과 통제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역대 총독의 통치방식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탄압·통제의 강경정책과 함께 때로는 홍보·회유의 온건정책을 가미하였다. 이러한 강·온 양면정책은 일본이 한국침략을 시작한 한말부터 써온 수법이였다.

탄압정책의 첫 단계는 한국인들이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이었다. 1910년 8월의 한일합방 후 강압적인 무단정치를 실시하면서 총독부는 한국인들이 발행하고 있던 기존의 신문을 모두 없애버리고 서울에서 발간되는 한국어 신문은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 하나만 남겨두었다. 반면에 신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한국인과는 다른 차별적인 법령을 적용하여 일인들은 서울과 각 지방 도청소재지에서 신문을 발행할 수 있었다.

1920년에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제한된 숫자의 신문 발행을 허용하였다. 이로써 《조선일보》·《동아일보》·《시사신문》(1924년부터는 《시대일보》·《중외일보》·《중앙일보》·《조선중앙일보》)의 3개 민간지가 허용되었으나, 신문에 대한 지면통제와 검열, 언론인에 대한 사법처분 등 다양하게 언론탄압을 가하였다. 특히 1930년대에는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언론통제는 더욱 엄격하고 조직적인 양상을 띠었다. ‘국책적 차원’에서 정보를 관리하고 신문의 기사와 편집 내용까지 간섭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같은 탄압은 1940년 8월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발행을 금지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총독부가 이와 같은 강압적 탄압과 병행하여 실시한 홍보·회유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자체 언론기관으로서 기관지를 창설하여 침략정책을 홍보하고, 反日여론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와 일어판 《경성일보》, 영어판 《*The Seoul Press*》를 동원하여 총독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특히 문화정치를 표방했던 1920년대 이후에는 선전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무단정치기에는 강압적인 명령으로 시행하던 식민지 통치방식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계몽적인 행정정보와 함께 총독부의 치적을 선전하였다. 선전영화를 제작하여 지방을 순회하며 상영하고 포스터와 기관신문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때의 선전과 홍보정책을 일컬어 흔히 총독부의 ‘광고정치’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었다.¹⁾ 1925년 2월 25일자 《조선일보》의 사설은 “누구나 조선총독부 정치를 비난할 때에 ‘광고정치’라 한다”고 말하면서 총독부가 정치적인 실적을 지나치게 선전 홍보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²⁾

둘째로는 국제여론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한 홍보전략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판물을 발행하고, 외국인 기자를 친선초대하여 선전에 동원하였다. 총독부의 영어 기관지 《*The Seoul Press*》가 그 같은 역할을 맡은 선전매체였다. 《*The Seoul Press*》는 통감부가 발행하기 시작했던 1907년부터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08년 6월 《대한매일신보》 사장 영국인 베텔(裴説, E. T. Bethell)에 대한 제2차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5월 23일에는 영문과 일어로 된 팜플렛 〈한국의 선동 신문〉(*Incendiary Journalism in Korea*, 같은 내용의 일어판은 韓國に於ける排日新聞紙)을 발행하여 《대한매일신보》의 국한문판 및 영문판 신문을 비난한 것을 비롯해서, 베텔의 재판이 끝난 뒤에는 3일간에 걸친 공판내

1) 《동아일보》, 1921년 6월 20일, 〈廣告는 商戰의 砲彈, 국가의 정치도 광고에 달려, 최근에 생긴 놀랄만한 사실〉.

2) 《조선일보》, 1925년 2월 25일, 사설 〈朝鮮經濟政策의 變遷, 廣告政治는 變解原理의 反證〉.

용을 전문 수록한 책자 《한국에서의 외국어 신문—베텔에 대한 재판》(*Foreign Journalism in Korea, Proceedings Against Mr. E. T. Bethell*)을 발행한 일도 있었다.³⁾ 신민회 사건으로 梁起鐸 등 민족진영 인사들이 대량으로 투옥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인 1912년에는 일어판 《朝鮮陰謀事件》과 영어판 《*The Conspiracy in Chosen*》이라는 제목으로 검사의 기소장, 피고들에 대한 신문 내용, 판결문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행했고, 3·1운동 때에도 이를 비난하는 팜플렛 〈조선의 ‘독립’운동〉(*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을 발행하였다.

셋째 비판적인 언론인 또는 언론기관을 매수하고 신문을 회유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총독부가 집계한 일제하의 언론탄압 자료에서 나타나는 〈간담〉과 같은 항목이 회유와 협박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2) 사전탄압과 사후탄압

신문에 대한 탄압과 통제는 크게 2단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신문을 제작하기 전 단계의 ‘사전탄압’과 제작된 신문에 대한 ‘사후탄압’이 그것이다. 사후탄압은 다시 ‘行政處分’과 ‘司法處分’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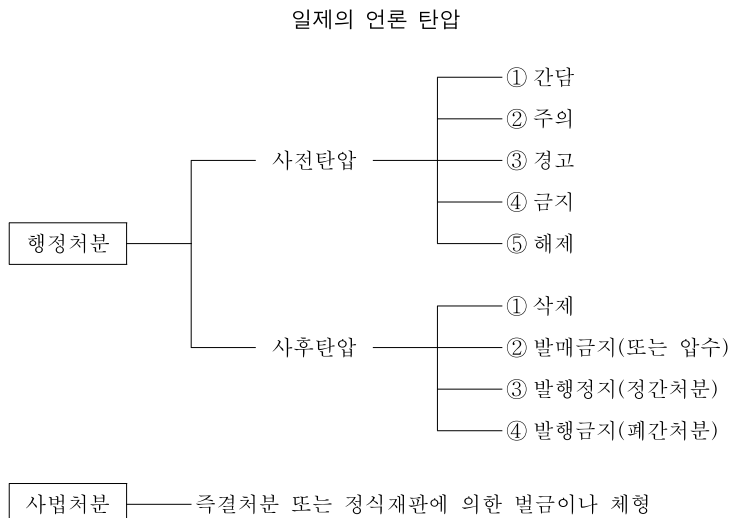
‘행정처분’이란 기사를 삭제하거나 또는 신문의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신문을 압수하는 처벌이다. 이에 비해 ‘사법처분’은 문제가 되는 기사의 집필자와 제작 책임자에게 벌금 또는 체형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사안인 경우는 행정처분과 함께 언론인을 처벌하는 사법처분을 병합하는 것이 통례였다.

신문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인 사법처분과 신문기사의 압수 등 행정처분의 처벌을 가한 법적 근거로는 光武 〈신문지법〉(1907. 7)을 비롯하여 〈출판법〉(1909. 2), 〈보안법〉(1907. 7), 〈치안유지법〉(1925. 4), 〈제령 제7호〉(1919. 4)와 형법의 〈명예훼손〉(제320조) 등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하였다. 사법처분과 함께 매일 발행되는 신문을 검열하여 제작된 신문의 기사를 삭제하고 신문을 압수하거나 정간(발행정지), 폐간(발행금지)과 같은 행정처분을 자행하는 일상

3) 정진석, 《대한매일신보와 배설》(나남, 1987), 263~268쪽.

——, 〈The Seoul Press와 일본의 對韓 침략 홍보〉(《신문과 방송》, 1986년 4월호), 74~87쪽.

적인 탄압도 빈번하였다.⁴⁾ 언론탄압의 형태를 도식화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일제의 언론탄압은 한국인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일본 안에서도 “발매 반포금지를 주로 한 형식의 검열제도는 외국에서도 전혀 그 유례가 없는 독특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⁵⁾ 그러나 식민지 한국에서의 언론탄압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嚴酷하였고 한국 안에서도 한국인에게는 일본인에 비해서 가혹한 차별적 법률을 적용하는 정책으로 억압하였다.

일제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에게 각기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법률을 적용하는 차별정책을 썼다. 한국인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계속출판물)에 대해서는 광무 〈신문지법〉을 적용하고 단행본(보통출판물)에 대해서는 〈출판법〉을 적용하였으나 일인들에게는 〈신문지규칙〉과 〈출판규칙〉을 적용하였다.

〈신문지법〉은 1907년 7월 24일에 李完用 내각이 법률 제1호로 제정 공포

4) 정진석 편,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모음》 I·II (LG상남언론재단, 1998).

——, 〈일제의 민족지 압수기사연구〉(《한국근대언론과 민족운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158~209쪽.

5) 奥平康弘, 〈檢閲制度〉(《講座 近代 日本法 發達史》 11, 1967), 6쪽.

한 것인데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적용되었던 법률로서 흔히 광무〈신문지법〉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법은 처음 공포될 당시에는 전문이 38조였으나 이듬해인 1908년 4월 20일에 개정하여 전문 41조와 부칙으로 되었는데, 갖가지 금지사항을 나열한 외에도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삭제·압수·발행정지(정간)·발행금지(폐간) 등의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언론인에 대한 사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된 악법이었다. 한국인들은 신문을 발행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許可制’를 채택하여 발행허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발행이 허가된 신문이라도 ‘保證金’을 납부하도록 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신문발행을 어렵게 만들어 두었다. 〈신문지법〉은 신문만이 아니라 잡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므로 한국인들은 신문과 잡지를 통틀어 원칙상으로는 〈신문지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신문지법〉에 의한 정기간행물은 〈출판법〉에 의한 간행물에 비하면 다소 편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총독부는 이를 허가해 주지 않기 위해서 〈출판법〉에 의해 잡지 발행을 허용하는 변칙적인 정책을 쓰기도 하였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일반 출판물(단행본)은 〈출판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1909년 2월 23일에 공포된 이 법은 전문 18조로, 조판하기 전에 원고를 사전에 검열한 다음에 인쇄한 출판물을 배포하기 전에 다시 ‘納本檢閱’을 받도록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어서 2중의 통제장치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에게 적용했던 〈신문지규칙〉(통감부령 제12호, 1908년 4월 30일 공포)과 〈출판규칙〉(통감부령 제20호, 1910년 5월 20일 공포)은 한국인에 비해서 규제가 훨씬 완화된 법률이었다. 한국인들에게 적용한 〈신문지법〉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허가제’로 묶어둔 반면에 일본인들에게 적용한 〈신문지규칙〉은 ‘届出’만 하면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한국 안에서도 일본인과 한국인을 차별하는 법률을 적용했던 것이다.

일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허가’ 자체를 극도로 제한하여 한일합방 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10년 동안은 한국인에게 단 한 건의 신문 발행도 허가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신문지법〉에 의해 발행된 한국어 일간지는 합방 전에 발행허가를 받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남 진주에서 발행되던 《경남일보》가 1914년경까지 발행되었다. 그밖에 종교 월간잡지 《天道敎會月報》와 의약 전문지인 《中外醫藥申報》(월간)가 〈신문지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었다. 이와 같이 무단정치 기간에 한국어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몇 종의 잡지와 미국인 선교사들의 명의로 발행하는 주간 종교신문 《基督申報》(1915년 12월 8일 창간)만이 명맥을 잇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인들은 1919년 이전까지 서울과 지방을 합쳐서 26개의 신문 또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다.

〈鄭晉錫〉

2. 무단통치기의 언론

1) 총독부 기관지 독점기

합방 후 한말에 발행되던 대표적 신문 《대국신문》·《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와 같은 민족 언론은 완전히 압살당하고 한국인들은 표현 기관을 갖지 못하였다. 일제는 합방과 함께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없애고 ‘대한’, 또는 ‘황성’·‘제국’ 등 한국의 독립을 상징하는 단어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신문의 題號도 수난을 겪었다. 《大韓新聞》은 《漢陽新聞》으로, 《皇城新聞》은 《漢城新聞》으로, 《大韓民報》는 《民報》로 각각 바뀌었다. 《대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가 되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 신문들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외에는 며칠 사이에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한국어로 발행되는 일간지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국한문판과 한글판 2종 발행)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민간지가 발간되지 못했던 1910~1919년 사이의 10년을 ‘無新聞期’(‘지하 신문기’와 ‘반민족신문기’)로 규정하거나,¹⁾ ‘암흑기’로도 부른다.²⁾ 1940년 8월부터 1945년 8월 사

1) 林根洙, 〈韓國 커뮤니케이션史 研究의 方法에 關한 一考察〉(《新聞研究》, 1975년 봄호), 116~146쪽.

2) 李鍾洙, 〈조선신문사〉(《東光》, 1931년 12월호), 73쪽.

이에는 두 번째로 민간지가 발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역시 ‘무신문기’에 해당한다고 규정짓는다. 이 시기에도 《매일신보》는 발행되었지만 이는 총독부의 기관지였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신문이 없는 ‘무신문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민족지가 발간될 수 없었던 시기에 나왔던 《매일신보》 역시 ‘신문’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일제 통치기간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史料的인 가치는 오히려 그만큼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반민족적인 신문이기는 하지만 민족지가 발간될 수 없었던 시기에는 《매일신보》가 중요한 사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1910~1920년과 1940~1945년 사이를 ‘무신문기’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총독부는 무단정치 기간에는 한국어신문 《매일신보》, 일어신문 《경성일보》, 영어신문 《더 서울 프레스》(*The Seoul Press*)와 같은 기관지 독무대가 되도록 하였으며, 민간지의 발행을 허용한 후에도 이들 기관지에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보호·육성했다. 세 기관지의 창간과정은 모두가 별개의 신문으로 출발하여, 합병 후에는 통합되었다가 다시 분리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매일신보》는 러일전쟁 직후인 1904년 7월 18일 영국인 베텔(Ernest Thomas Bethell, 裴說)이 창간한 《大韓每日申報》를 매수하여 제호를 바꾼 것이다. 《대한매일신보》는 梁起鐸·朴殷植·申采浩 등 민족진영 인사들이 참여하여 한말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언론기관이었다. 일제의 탄압과 싸우던 베텔은 1908년 5월 27일부터 발행인 명의를 영국인 만함(Alfred W. Marnham, 萬咸)으로 바꾸어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하다가 1909년 5월 1일에 사망하였다. 대한제국의 국운이 기울자 만함은 이 신문을 통감부에 700파운드를 받고 매도하였다. 만함이 평가했던 《대한매일》의 매도 금액은 500파운드였는데 통감부는 만함이 평가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매수하였던

霞 汀, 〈朝鮮新聞發達史〉(《新東亞》, 1934년 10월호), 56쪽.

車相瓚, 〈朝鮮新聞發達史〉(《開闢》, 1935년 3월호).

崔 竣, 《韓國新聞史》(일조각, 1965), 186쪽.

위의 논문이 모두 1910~1920년 사이를 ‘암흑기’로 부르고 있다.

것이다. 만함은 이 금액에 만족했고, 통감부도 그 동안 골칫거리였던 이 신문에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³⁾

일본이 이 신문을 매수한 것은 한일합방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인 5월 21일이었다. 통감부는 이 신문을 매수한 사실을 비밀에 부친 채 발행인을李章薰으로 잠시 변경해 두었다가 한일합방이 되자 즉시 친일적인 신문으로 논조를 바꾸었다. 합방 이튿날인 1910년 8월 30일부터 《대한매일신보》의 ‘대한’ 두 자를 떼고 《每日申報》로 제호를 바꾸어 본격적인 친일 총독부의 기관지가 되었다. 그러나 지령은 《대한매일신보》를 그대로 이어받아 국한문판은 제 1642호, 한글판은 제 939호부터 출발했다. 《매일신보》는 합방 후에 발행한 첫 호에 〈同化의主義〉라는 논설을 싣고 합방으로 일본과 한국이 공동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京城日報》는 1906년 9월 1일에 통감부 기관지로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유력한 신문을 발행하여, 對韓보호정치의 정신을 내외에 선양하고, 日鮮融和의 大義를 唱導”한다는 명목으로 창간하였다. 이토는 주한 일본공사관의 비밀 기관지였던 《漢城新報》와 기쿠치 겐조(菊池謙讓)의 《大東新報》를 매수하여 새 신문을 창간하면서 《경성일보》라 이름지었다.⁴⁾

영문 일간지 《더 서울 프레스》는 원래 영국인 하지(Alfred Weekley Hodge)가 1905년 6월 3일에 창간하였는데 1906년 12월경 통감부가 매수하여 기관지로 만든 신문이었다. 이토는 이 신문을 베텔의 《코리아 데일리 뉴스》(《Korea Daily News》)와 선교사 헐버트(Hulbert)의 《코리아 리뷰》(《Korea Review》)에 대항하려는 목적에서 발행하였는데 합방 후에는 총독부의 기관지가 되어 일본의 한국 침략정책을 외국인들에게 홍보하였다.

3) 정진석, 《대한매일신보와 매설》(나남, 1987), 458~363쪽.

런던에 있는 영국 공공기록보관소(Public Record Office) 소장문서, FO 262/1065, Bonar가 MacDonald에게, 21 May 1910, No. 34 : FO 371/877, Bonar가 Gray에게, 21 May, No. 30, pp. 205~212.

4) 藤村生, 〈京城日報社 由來記, 歷代社長の能不能と其退社理由〉(《朝鮮及滿洲》, 1924년 9월호), 39~48쪽.

2) 도쿠토미의 《국민신문》과 《매일신보》

《매일신보》는 국한문판과 한글판 두 가지 신문을 발행하는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었다. 그러나 《매일신보》는 독립된 신문사가 아니라, 총독부의 일본어 기관지인 《경성일보》에 통합되어 《경성일보》의 일본인 사장과 편집국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발행되었다.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를 통합한 새 《경성일보》의 최고 책임자로는 일본 貴族院의원이면서 《國民新聞》의 사장인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峯)가 취임하였다. 도쿠토미는 25살 때인 1887년 2월에 民友社를 창설하여 월간지 《國民之友》를 발행하기 시작한 이래 《국민신문》(1990. 2), 《家庭雜誌》(1992. 9), 《더파 이스트》(The Far East, 1996. 2)를 연달아 창간하였다. 도쿠토미는 정치인 이면서 언론인이었고, 동시에 역사학자였던 거물로 서울에 상주할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경성일보》의 감독이라는 지위에서 요시노 타자에몽(吉野太左衛門)을 《경성일보》 사장에 임명하였다.⁵⁾ 요시노는 도쿠토미가 경영하는 《국민신문》에서 부편집장 겸 정치부장, 理事 등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이로써 《경성일보》—《매일신보》는 총독부의 기관지이면서 도쿠토미의 감독하에 위탁경영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매일신보》의 판권에 기재된 형식상 편집인과 발행인은 한국인이었다. 합방 직전 통감부가 《대한매일신보》를 매수했을 때에 발행인으로 내세웠던 이장훈은 합방 후에도 잠시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남았다가 2개월 후인 10월 22일에 물러나고 이때부터는 발행 겸 편집인 卞一, 인쇄인은 李蒼으로 바뀌었다. 변일은 《대한매일신보》 때부터 이 신문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매일신보》의 발행인과 편집인은 경영이나 편집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편집장’ 정도의 제작실무를 맡은 사람에 불과했다.

《매일신보》는 1912년 3월 1일부터는 한글판 신문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면인 제3면을 한글전용으로 제작했다. 한글판 《매일신보》는 1907년 5월 23일에

5) 藤村生, 위의 글, 39~48쪽.

《京城新報》, 1910년 10월 6일, 〈京城日報の披露〉.

창간되어 국한문판과 함께 합방 후까지 발간되었으나 5년만에 국한문판에 통합된 것이다. 《매일신보》는 한글판을 ‘폐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확장’이며 ‘습刊’이라고 주장하는 〈社告〉를 게재하였다. 한글판을 없애면서 우리 나라 신문으로는 처음으로 한글 5호 활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한글 5호 활자의 글자체는 閔友植의 부인이 쓴 한글 궁체로서 자모는 동경에 있는 민우사의 협조를 얻어 만든 것이다.⁶⁾ 민우사도 도쿠토미가 경영하는 출판 잡지사였다.⁷⁾ 민우사는 1898년부터 인쇄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매일신보》의 한글활자 개량작업을 맡았던 것이다.

1913년 11월 11일 경성일보사는 자본금 7만 원의 합자회사로 조직을 바꾸었다.⁸⁾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일신보》는 합자회사 《경성일보》가 발행하는 자매지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합방 후 《매일신보》의 제작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편집장이었던 변일은 1915년 1월에 물러나고,⁹⁾ 1월 30일부터는 鮮于日이 발행 겸 편집인이 되었다. 선우일도 관권에 발행 겸 편집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사내의 지위는 일인 편집국장 아래에 있는 편집장이었다. 1915년의 《매일신보》 편집진은 편집장 선우일, 硬派主任 趙重桓, 軟派主任 李相協이었다.¹⁰⁾

1918년 6월에 감독 도쿠토미가 《경성일보》에서 손을 떼자 《매일신보》와 일본 《국민신문》과의 관계도 중지부를 찍었다. 같은 해 9월 18일부터는 《매일신보》는 편집과장 이상협이 발행 겸 편집인이 되었다. 그 직후인 이해 11월 4일부터는 월요일 휴간제를 없애고 연중 무휴간제로 발행되었다. 1년 뒤인 1919년 8월 이상협이 《동아일보》 창립에 참여하기 위해 《매일신보》를 떠나자 方台榮이 발행 겸 편집인에 취임했다.

6) 《매일신보》, 1938년 5월 1일, 좌담회 참조.

7) 和田守・有山輝雄, 〈民友社・國民新聞社の成立展開〉(《德富蘇峰 民友社關係 資料集》民友社 思想文學叢書 제1권, 일본:三一書房, 1986), 428~429쪽.

8) 《朝鮮總督府官報》, 1913년 11월 11일.

9) 《매일신보》, 1915년 1월 17일, 〈退社之辭〉.

10) 《新聞總覽》(일본 전보통신사, 1915년판), 673쪽.

3) 잡지의 발달

무단정치기에 가날프게나마 민족언론의 명맥을 이어 내려온 것은 잡지였다. 이 기간의 대표적인 잡지는 최남선이 창립한 新文館에서 발행한 《소년》(1908. 11~1911. 5, 통권 23호 발행)에서 비롯하여 어린이 신문 《붉은 저고리》(1911. 1~1911. 6, 월 2회 발간, 12호 발행), 《새별》(1913. 4~1915. 1, 15호 발행), 《아이들 보이》(1913. 9~1914. 9, 13호 발행)를 거쳐 《청춘》(1914. 6~1917. 9, 15호 발행)에 이르는 여러 잡지들이었다. 이들 잡지도 정치와 시사문제를 다룰 수는 없었지만 민중의 계몽과 근대화, 문학의 발전, 그리고 민족의식의 고취 등을 편집의 주된 방향으로 삼아 발행되었다.¹¹⁾

일반 종합잡지의 발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종교잡지와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발행한 잡지가 이 시기 잡지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 기간에 발행된 잡지는 50여 종 가까이 되는데¹²⁾ 종교계통 잡지가 24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그 가운데는 천도교 기관지 《天道教會月報》가 대표적인데 1910년 8월 15일에 창간되어 1937년 5월까지 295호가 발간되는 동안 종교잡지였지만 교리연구와 선교의 목적 외에 민중계몽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 밖에 侍天敎의 《侍天敎月報》(1911. 2~1913. 4), 불교의 《朝鮮佛敎月報》(1912. 2~1913. 8), 《海東佛敎》(1913. 11~1914. 6) 등이 있었다.

일본 유학생들의 잡지도 계속 발간되어 《學界報》(1912. 4), 《學之光》(1914. 3), 《女子界》(1915. 8), 《基督青年》(1917. 11), 《學友》(1919. 1), 《三光》(1919. 2), 《緣星》(1919. 11) 등이 있었으나 오래 발행되지는 못했다.

특이한 현상으로는 일인들이 한국어로 발행하는 잡지도 나타났는데 세 가지 부류가 있었다. 첫째는 관청 또는 단체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한국인들에게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1923년에 창간된 《朝鮮地方行政》, 1929

11) 金根洙, 《한국잡지사》(청록출판사, 1980), 68~72쪽.

12) 白淳在는 49종, 金根洙는 46종을 열거하고 있다.

白淳在, 〈한국잡지발달사〉(《한국잡지총람》, 한국잡지협회, 1973), 63쪽.

金根洙, 위의 책, 60~62쪽.

년에 창간된 《朝鮮消防》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실제로는 한국인이 발행하면서 원고의 사전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일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일인 명의를 빌려 잡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문지규칙〉 또는 〈출판규칙〉의 적용을 받아 발행할 수 있었으며, 그런 경우 발행의 허가제가 아닌 계출에 의해 잡지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원고검열을 사전에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잡지 발행이 훨씬 용이했다. 세 번째는 일인이 한국의 대중을 상대로 출판사업을 벌이며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업적 목적의 잡지가 있었다. 이 부류의 잡지로는 다케우치 로쿠노스케(竹内録之助)가 중심이 되어 발행한 《新文世界》(1913. 2), 《新文界》(1913. 4), 《우리의 가정》(1913. 12), 《半島時論》(1917. 4) 등이 있다.

이 기간에 새롭게 나타난 특징은 191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본격적인 문학 잡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서구문학을 주로 소개한 《泰西文藝新報》와 순문예지 《創造》가 이러한 예인데, 이들 잡지는 20년대 초반에 나타나는 여러 문학 동인지의 선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태서문예신보》는 1918년 9월 26일에 창간된 타블로이드판 8면 신문 형태의 주간지로서 3·1운동 직전인 1919년 2월 17일까지 모두 16호가 발행되었다. 내용은 주로 서구문학작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金億이 롱펠로(H. W. Longfellow), 투르게네프(I. S. Turgenev), 예이츠(W. B. Yeats) 등의 작품을 소개했다. 《창조》는 3·1운동 한 달 전인 1919년 2월 1일 동경 유학생들이 창간했는데, 1921년 5월까지 서울에서 발행되었으므로 1920년대의 잡지로 분류할 수 있다.

〈鄭晉錫〉

3. 문화정치기의 언론

1) 3·1운동 직후의 여러 독립신문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키면서 민족진영에서는 신문 발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독립신문이라는 제호의 지하신문들이 서울과 각 지방을 비롯하여 해외에서도 여러 종류가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나온 신문은 독립운동이 일어난 3월 1일에 창간된 《조선독립신문》이다. 이 신문 발간의 주동 인물은 李鍾一·李鍾麟·朴寅浩·尹益善·金弘奎 등이었다. 이종일은 1898년 8월에 《대국신문》을 창간 운영해 왔던 한말 언론의 주요 인물이었고, 3·1운동 당시는 천도교가 경영하는 普成社와 《천도교회월보》의 사장으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¹⁾

《조선독립신문》은 3월 1일 윤익선을 사장으로 첫 호를 발간했는데 33인의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알렸다.²⁾ 그러나 첫 호를 발간한 후 이종일과 사장 윤익선이 체포되자, 이종린과 張倬健이 뒤를 이었고, 그 후로도 여러 사람의 또 다른 후계자들이 비밀리에 발행하여 이해 6월 22일까지 36호를 발행했고, 8월 29일에는 국치기 넘호까지 발행하였다.³⁾ 이 신문 창간당시의 사장이었던 윤익선은 보성법률 상업학교 교장이었다. 그는 〈출판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⁴⁾ 1년 6개월 뒤인 1920년 9월 2일에 출옥했다.⁵⁾

《獨立自由民報》라는 지하신문도 있었다. 이를 발간하던 柳然化·崔碩寅·白光弼은 〈출판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년 반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 정진석, 《역사와 언론인》(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87~115쪽.

2) 윤병석, 〈조선독립신문의 拾遺〉(《中央史論》 1, 중앙대, 1972), 77~95쪽.

——, 〈1910년대 일제의 언론정책과 ‘독립신문’류〉(위암장지연기념사업회 편, 《한국근대언론과 민족운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136~157쪽.

최 준, 〈삼일운동과 언론의 투쟁〉(《三一運動 50주년 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325~337쪽.

3) 《朝鮮獨立新聞》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獨立運動史》 자료 5(탐구당, 1975), 1~10쪽 참조.

4) 《매일신보》, 1919년 9월 16일, 〈出版保安法違反犯의 豫審終結決定書, 尹益善 이하 七名〉.

鄭光鉉, 〈三一運動 被檢者에 대한 適用法令〉(《三一運動 50주년 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467~470쪽.

《獨立》, 1919년 10월 2일, 〈尹 獨立社長の 公判〉.

5) 《매일신보》, 1920년 8월 23일, 〈九月二日 滿期出獄된 獨立新聞사장 尹益善〉.
《동아일보》, 1920년 9월 3일, 〈獨立新聞 事件의 尹益善씨 出獄〉.

가 1921년 2월 28일에 석방되었다.⁶⁾ 3·1운동을 계기로 발간되기 시작한 지하신문은 이 밖에도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까지 여러 종류가 발간되었다.⁷⁾ 대부분 실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현재 그 제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발행된 것이 29종, 서북간도 등 만주에서 발행된 것 13종, 러시아 연해주(露領沿海) 5종, 상해를 비롯한 중국 7종, 미국과 프랑스 파리의 5종 등이다.⁸⁾ 이같은 상황에서 친일신문도 나타났다. 1919년 7월 21일 鮮于日이 만주 봉천에서 창간한 《만주일보》는 일본당국의 지원을 받아 발행된 친일지로 3·1운동 후 해외에서 우리말로 발행된 첫 일간신문이었다.⁹⁾ 상해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항일운동의 본거지로 되면서 신문발행의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후 국내외에 선포된 여러 개의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성립되었다. 상해 임시정부에 앞서 제일 먼저 성립된 것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민국 의회정부였고, 국내에서는 서울의 한성 임시정부, 상해의 임시정부 등이 있었다.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4월 10일과 11일 제1회 임시 의정원 회의를 열고 李東寧을 의장으로 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年號 및 官制, 임시 憲章 10개조와 헌장 선포문 등을 채택하였다. 임시정부는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선출하고 6부의 총장과 차장, 국무원 비서장을 뽑고, 4월 13일에는 이를 내외에 공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¹⁰⁾ 이 상해 임시정부를 주축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서울 등 여러 갈래의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9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새로이 출범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신문과 선전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잘 알고 있었다. 1919년 5월 12일 국무위원 趙琬九는 국무원에서 결의한 시정방침 연설 가운데 정치

6) 《동아일보》, 1921년 3월 1일, 〈獨立自由民報事件 三氏 出獄〉.

7) 朝鮮總督府 警務局圖書課, 《朝鮮出版警察概要》(1934년판), 117~132쪽.
정진석, 《언론과 한국현대사》(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340~341쪽 참고.

8) 윤병석, 앞의 글(2001), 153~155쪽.

9) 정진석, 앞의 책(2001b), 341~344쪽.

10)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상(서문문고 191, 1975), 225~228쪽.

李康勳, 《大韓民國臨時政府史》(서문문고 184, 1975), 11~53쪽.

李炫熙, 《大韓民國臨時政府史》(集文堂, 1983), 47~83쪽 참조.

고문과 신문고문 각 1명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고,¹¹⁾ 임정의 중심인물이었던 안창호가 가장 열성을 기울여 추진했던 일이 선전사업이었다.¹²⁾ 8월 29일에 개정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저작·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8조 3항).

상해에 모인 한국인들은 新韓靑年團과 居留民團을 조직했는데 신한청년단은 1919년 3월 또는 4월 무렵부터 《우리소식》이라는 등사판 통신을 주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2) 상해의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20일 전인 8월 21일에 李光洙를 사장으로 창간되었다. 국내에는 아직 민간신문 발행이 허가되기 전이었는데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나라 안팎에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을 고취하면서 상해를 비롯하여 국내와 중국·만주·러시아·미주지역에 걸쳐서 널리 배포되었다.

《독립신문》을 국내에 배포하거나 열람하다가 일경에 체포 투옥된 사람도 많았지만, 신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활동을 벌인 사람도 있었다. 어려운 망명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이 내 놓는 성금으로 신문은 몇 번이나 끊어질 듯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6년에 걸쳐 발행되는 동안 임시정부의 정책을 선전하고 도우며 독립군의 단결에 힘쓰고 밖으로는 세계에 우리 사업을 선전하여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¹³⁾

이 신문은 1919년 8월부터 1925년 11월 종간될 때까지의 기간을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장 이광수와 영업부장 李英烈이 주도했던 시기로 창간으로부터 1921년 6월까지이다. 두 번째는 金希山(본명 金承學)이 운영했던 시기로 1921년 10월부터 1924년 12월까지이며, 마지막으로

11)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民族主義運動篇-(東京:原書房, 1967), 196쪽.

12) 주요한 편, 《安島山全書》(샘터사, 1979), 621~787쪽의 안창호의 일기에는 그가 선전사업에 힘쓴 사실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13) 《독립신문》, 1922년 6월 3일, 〈獨立新聞과 獨立運動〉.

1925년 1월 무렵부터 이해 11월까지 朴殷植이 사장이었던 시기이다.

창간 당시의 사장은 이광수였으나 창간 과정에서부터 이 신문의 실질적인 중심점은 安昌浩였다. 안창호는 창간을 발의하고 미국에서 자금을 들여오기도 하였다. 안창호는 통합된 임시정부의 노동국 총판이라는 지위였으나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중심인물이었다. 사장 이광수와 출판부장 朱耀翰은 안창호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면서 홍사단 단원이었다.¹⁴⁾ 이 시기는 논조에 있어서도 안창호의 영향이 컸다. 독립운동의 방략과 임시정부의 통합운동 등에 관해서 안창호의 노선을 대변했다. 이광수가 썼다는 〈국민개업〉(1921. 4. 2)이나 1920년 6월에 게재된 연재논설 〈赤手空拳〉은 안창호의 독립운동 방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¹⁵⁾ 《독립신문》은 일반적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로 알려져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기관지로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기관지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임정과 여러 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은 있지만 독자적인 언론기관으로 운영된 측면도 크기 때문이다.

이광수에 이어 《독립신문》의 경영을 맡았던 김승학은 원래 만주지방의 독립군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만주지방에 기반을 둔 독립운동 조직 또는 개인적인 후원자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사장 박은식이 취임했을 때에는 경영이 매우 어려웠다. 그는 곧 제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나 악화된 신문의 경영을 회복시키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 독립운동의 전반적인 상황이 침체기에 들어섰고 국제 및 국내 정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신문을 유지해 나가기도 어려워졌다.

이 신문 발간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헌신했지만, 이국 땅에서 탄압 받는 가운데 재정적 궁핍을 참으면서 6년 이상이나 신문을 이끌어 왔던 원동력이 된 것은 해외와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었다. 따라서 이 신문을 단순히 임시정부의 기관지로 보는 것은 정확한 성격 규정이라 할 수 없으며, 어느 개인이나 어느 독립운동 계보의 기관지는 더구나 아니었다.

14) 정진석, 앞의 책(2001b), 278~333쪽.

15) 주요한, 《島山 安昌浩傳》(三中堂, 1975), 132쪽 이하 참조.

3) 3대 민간신문의 창간

1920년은 한국 언론사에 큰 전환점이 그어진 해였다. 총독부는 합방 이후의 강압적인 ‘무단정치’를 ‘문화정치’로 위장하면서 무단정치 시대의 헌병경찰 대신에 보통경찰제도를 시행하는 등 몇 가지 변화를 보였는데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하나로 한국인들에게도 제한적으로나마 일간지의 발행을 허용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일보》·《동아일보》·《시사신문》의 3개 민간지가 창간되어 10년 동안 막혀 있던 민족진영의 의사를 제한된 상황 속에서나마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언론 상황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1) 《조선일보》

1920년 3월 5일 ‘신문명 진보의 주의’를 선언하면서 서울 관철동 249번지에서 창간되었다. 《조선일보》의 발기인은 금융인·자선사업가·변호사·의사·교육가·일반실업인 등 39명으로 자본금 20만 원 규모의 ‘조선일보설립 발기인조합’을 조직하여 창간준비가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11명이 친일 경제단체 大正實業親睦會 소속이었다. 사장 趙鎭泰(친일은행 두취), 발행인 겸 부사장 芮宗錫, 편집국장 崔 岡이 대정실업친목회 회원이었으나 자본금 20만 원 가운데 실제로 불입한 금액은 5만 원에 지나지 않았고, 경영은 순탄치 못하였다. 창간 당시에는 인쇄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3월 5일에 창간호를 내놓은 뒤 5월 9일까지 겨우 제5호를 발간한 다음에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가 있었다. 6월 12일에는 사장 조진태와 부사장 예종석이 물러나고 편집국장 최 강이 발행인을 겸하였다가 창간 5개월만인 8월 12일부터는 대정실업친목회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¹⁶⁾ 이리하여 8월 15일자로 劉文煥이 사장에 취임하였으나 12월 2일에 또다시 발행인이 바뀌어 權丙夏가 뒤를 이었다. 1921년 4월 8일에는 宋秉喆에게 판권이 넘어가면서 사장은 南宮薰, 편집국장은 鮮于日이 맡았다.

16) 《조선일보 80년사》(조선일보사, 2000), 102쪽.

1924년 9월에는 申錫雨가 송병준으로부터 8만 5천 원을 주고 경영권을 인수하여 《조선일보》의 판권은 이때부터 완전히 민족진영으로 넘어와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신석우는 발행인 겸 부사장이 되고 민중의 지도자로 명망이 높던 月南 李商在를 사장에 추대하였다. 이사진으로는 安在鴻·백계현·白寬洙·李相協·최익선·金東成·愼九範 등이 취임하고 편집진도 크게 보강 정비하는 동시에 ‘조선민중의 신문’이라는 새로운 표어 아래 경영·제작 양면에서 혁신을 단행하여 일신된 모습을 보였다.

이때의 혁신은 《동아일보》의 창간 실무에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李相協이 同社의 내분으로 《동아일보》를 떠나면서 여러 명의 기자들을 이끌고 《조선일보》로 와서 지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혁신 《조선일보》의 제작진으로는 편집국장 閔泰瑗을 필두로, 논설위원 안재홍·金俊淵·辛日鎔, 편집부에 이송은·이상길·손영주, 사회부에 金炯元·김달진·朴憲永·林元根·金丹治·鄭寅翼, 지방부에 洪憲裕·洪南杓, 공장장 최익선 등이었는데 이들 가운데는 사회주의자들도 끼어 있었다.

이상재가 사장에 취임한 후에 《조선일보》는 다양한 사업을 새로 선보였다. 11월 23일부터는 민간신문 최초로 조석간을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민간 지로는 첫 여기자 崔恩禧를 채용했고, 12월에는 《조선일보》본사와 관철동의 우미관 사이를 연결하는 라디오 공개방송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정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처음으로 공개 시험방송을 실시한 것이다. 일본에서 도입한 윤전기를 이용하여 컬러 인쇄를 선보인 것은 이듬해 2월 12일이었다. 1925년 2월 21일에는 김준연을 러시아에 특파하여 〈勞農 러시아의 觀相〉을 40여 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1927년 2월 15일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을 총망라한 항일민족 단일전선 新幹會가 결성되었는데, 1932년에 이 단체가 해산될 때까지 《조선일보》는 신간회의 본부와 같은 역할을 맡아 이를 바탕으로 6개 악법철폐운동을 전개했다. 신간회의 회장에는 사장 이상재가 추대되었고 부사장 신석우, 주필 안재홍 등이 신간회를 주도한 사람들이었다. 전국 1백 38개 신간회 지사도 대부분 《조선일보》지국이 겸했으며 사원 가운데도 회원이 많았다. 1927년 3월 29일 이상재가 사망한 후에는 신석우가 사장에 취임하여 1931년

5월까지 재임한 뒤에 퇴임하자 부사장 안재홍이 후임 사장이 되었다.

(2)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에 창간되었다. 발행 겸 편집인 李相協, 인쇄인 李容文의 명의로 총독부의 발행허가를 얻었는데, 주식을 인수한 78명은 각 도의 유지를 망라하였고, 그 가운데 중심인물은 중앙학교의 교장 金性洙였다. 창간 당시의 사장은 朴泳孝, 편집감독 柳瑾·梁起鐸, 주간 張德秀, 발행인 겸 편집국장은 이상협이었다. 창간사에서 밝힌 주지는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하노라”,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의 세 가지였다.

초기의 편집진은 대부분이 20대 청년들이 주축을 이룬 ‘청년 신문’이었다. 사장 박영효와 편집감독 유 근은 같은 나이인 59세였고, 양기탁은 49세였으나 실질적으로 제작을 담당한 기자들은 대부분이 20대였다. 발기인 대표 김성수가 29세였고, 주간 장덕수가 25세, 편집국장 이상협이 27세, 논설위원 겸 정치부장 秦學文이 26세 등이었다. 논설기자도 장덕준(28세)·金明植(29세)이 20대 후반이었다. 평기자 가운데는 김정진(32세) 만이 30을 넘었을 뿐, 金東成(30세)·南相一(24세)·廉想涉(23세)·韓基岳(22세)·柳光烈(21세)·李瑞求(21세)·김형원(20세) 등으로 20대 초반이 많았다. 일제치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동아일보》의 경영을 맡게 되는 송진우가 1921년 9월에 사장에 취임했던 때는 32세였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이 만드는 신문은 내부의 갈등과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였다. 총독부로부터 신문이 빈번한 압수를 당하여 창간된 첫 해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모두 정간처분을 받았다. 당시의 사회전반에 걸쳐서 청년들의 진보적인 사고는 노년층 또는 儒林과도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동아일보》 내부에서도 청년층과 노년층의 세대차이에 의한 갈등이 있었다. 초대 사장 박영효는 명의만 빌려준 셈이었고 2개월 동안 재임한 뒤에 물러났다. 박영효가 단명으로 사장직을 내 놓아야했던 것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세대차이가 빚은 갈등도 주된 원인의 하나였다. 29세의 청년 논설기자 김명식이 집필한 연속사설 〈조선 父老에게 고함〉(1920. 5. 4~9, 6회 연재)과 權惠圭가 기고하여 5월 8·9일 양일간에 걸쳐 게재한 〈假明人 頭上의 一棒〉이

유림의 불만을 사서 불매동맹까지 일어나자 박영효가 이를 감당치 못하겠다 하여 사장직을 내 놓은 것이다.¹⁷⁾ 김명식의 사설은 고질적인 낡은 인습을 비판하고 父老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새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젊은 세대가 앞장설 것을 강조한 내용이고, 권덕규는 조선유교의 末流가 慕華 사대사상으로 인해 자주정신을 상실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세력을 비판하였다.¹⁸⁾

1923년 5월에는 이광수가 촉탁으로 입사하였다. 이듬해 5월에는 趙東祐가 논설기자로 입사하였고, 1925년 7월에는 朱耀翰이 입사하였다. 이들 세 사람은 상해에서 《독립신문》을 만들던 사람들이다. 《동아일보》의 주요 제작진 가운데는 당시에, 또는 후에 사회주의자로 활약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장덕수에 이은 제2대 주필 겸 편집국장 洪命憲(1924. 5~1925. 4), 이광수에 이은 제4대 편집국장 金俊淵(1927. 10~1928. 5), 영업국장 洪增植(1921. 9~1924. 5)을 비롯하여 조동호 등 기자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으나 1924년과 그 이듬해에 대부분이 《조선일보》로 옮겨갔다.

《동아일보》도 처음에는 경영이 어렵기는 했지만 다른 민간지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된 경영 상태였는데 1921년 9월 주식회사 체제를 갖추면서 宋鎮禹가 사장에 취임했다. 송진우는 1919년 3월, 3·1운동의 지도자 48명과 함께 투옥되어 옥고를 치른 후, 동아일보사가 주식회사로 그 기반을 굳힐 무렵에 입사하여 3차례에 걸쳐 사장을 맡으면서 한 생애를 《동아일보》와 더불어 보내게 되었다.¹⁹⁾ 《동아일보》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여러 사업을 벌였다. 창간 첫 해 8월에는 미국 국회의원단의 극동시찰을 기회로 장덕준·金東成 두 기자를 북경에 파견하여 국내의 실정을 알리는 외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21년 김동성의 국제기차대회 참석, 1922년의 재외동포 위문모금운동(3월 6일부터 약 1년간), 재외교포 위문을 위한 순회강연과 安昌男의 고국방문 비행 주최, 1923년 9월 일본 관동대지진 때의 교포 학살 참상을 취재·보도하는 활동 등을 전개했다. 1924년 4월부터는 중부·서북·삼남의 3개 지방판 분리

17) 金明植, 〈筆禍와 論戰〉(《三千里》, 1934년 11월호), 32~35쪽.

18) 《東亞日報社史》1(동아일보사, 1975), 134~138쪽.

19) 정진석, 앞의 책(2001a), 223~265쪽.

김학준, 《고하 송진우평전》(동아일보사, 1990).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독립을 향한 집념-고하 송진우전기》(동아일보사, 1990).

편집을 시도하여 지방판 발행을 선도하였다.²⁰⁾

《동아일보》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스포츠 행사도 주최했다. 창간 첫해에 일본의 성악가 柳兼子 초청 독창회, 일본 유학생 순회강연회 등을 비롯해서 1923년 6월 30일에 처음으로 시작한 전국 여자 정구대회는 국내 최초의 여자 공개 스포츠였으며, 동아수영대회(1929. 9. 1), 동아마라톤대회(1930. 4)도 체육진흥에 이바지했다. 광복 후 1947년 8월에 시작한 전국 중학 지구별 초청 야구대회 주최는 현재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야구 쟁패전으로 계속되고 있다.

(3) 《시사신문》

1920년에 창간된 또 하나의 민간신문은 閔元植이 발행한 친일지 《時事新聞》이었다. 이 신문은 《동아일보》와 같은 날인 4월 1일에 창간되었는데 민원식이 주재하던 協成俱樂部를 國民協會로 개칭하여 그 기관지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았다. 사장 민원식, 부사장 金明潛, 주간 李東雨, 편집주임 金 丸, 경리주임 方漢復의 진용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른바 ‘內地延長주의’를 표방하는 이 신문의 친일적인 논조로 말미암아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다가 1921년 2월 16일 민원식이 동경에서 항일투사 梁滄煥에게 살해당하자 자연히 폐간되고 말았다. 그 후 월간 《시사평론》, 일간 《民衆新聞》(1930년 2월 1일 창간)으로 판권이 이어 내려오다가 1934년 무렵에는 주간으로 바뀌었으나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사라졌다.

4) 《시대일보》와 《중외일보》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는 민간신문이 출현하는 때인 1920년에는 기구를 개편하여 일제 강점 후 《경성일보》의 편집국장 밑에 한 개의 部와 같은 형태로 예속되어 있던 《매일신보》를 독립된 편집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社則을 개정했다. 《매일신보》는 합방 후 10년만에 《경성일보》에 소속된 상태이

20) 동아일보사, 《민족과 더불어 80년》(동아일보사, 2000).

기는 했지만 독립기구로 승격한 것이다. 《매일신보》는 이전까지 硬派와 軟派의 2개 부로 나뉘어 있었는데, 편집국이 독립하면서 논설부·편집부·외사부·사회부·지방부의 5개 부서가 설치되었다.²¹⁾ 그러나 사장 이하 이사 등 경영진을 비롯하여 영업·광고 등의 업무부분은 모두 일인들이 독점했다.

(1) 《시대일보》

《조선일보》·《동아일보》보다 4년 늦게 출발한 또 하나의 민간지가 《時代日報》이다. 《시대일보》는 1926년 8월 무렵에 폐간하였으나 뒤를 이어 《中外日報》(1926. 11. 15), 《中央日報》(1931. 10. 14), 《朝鮮中央日報》(1933. 3. 7)로 이름이 바뀌면서 1936년 9월 4일까지 3대 민간지의 하나로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제호가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경영주가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창간하는 형식을 취했다. 발행허가를 새로 얻고, 제호가 달라지고 경영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각기 별개의 다른 신문이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문에 관련된 사람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경영주와 제호는 달라지면서도 기존 신문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여 창간되었으므로 실은 《시대일보》에서 출발한 하나의 신문이 제호를 바꾸고 경영주를 달리하여 계승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시대일보》는 崔南善이 1924년 3월 31일에 창간하였다. 최남선은 3·1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출옥한 뒤에 1922년 9월 3일부터 타블로이드판 20페이지의 주간 신문 《東明》을 발행하였는데 이듬해 6월 3일까지 통권 41호를 발간한 후 주간 신문의 발행은 중단하고 새로운 일간지 《시대일보》를 창간하였다.

《시대일보》는 편집과 내용이 기존 신문보다 신선하여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최남선은 신문 경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계속 해서 투입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끌어 들일 계획이었으나²²⁾ 약속했던 사람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신문

21) 《매일신보》, 1926년 6월 1일, 〈我社の 回顧 二十年〉.

22)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역사비평사, 2001), 1923년 10월 13일(248쪽), 11월 4일(248~249쪽)에 최남선이 윤치호를 상대로 시대일보의 창간자금을 모금하

은 구독료와 광고료가 주된 수입원인데 구독자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었고, 빈약한 당시 조선의 경제 상황에서 광고의 유치도 여의치 않았다.

최남선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창간 2개월 후인 6월 2일, 邪敎집단이었던 普天敎에 발행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경영에 소요되는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적으로 일대 물의를 빚게 되어 최남선은 신문 경영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²³⁾ 최남선의 후임으로는 洪命熹가 사장에 취임하였으나 경영난을 타개하지는 못하고 1926년 8월 중순부터 발행을 중단하였다. 이와 함께 무한 책임 사원 전원이 퇴사하여 회사는 해산되었고, 《시대일보》의 발행 허가도 소실되어 2년 5개월 정도의 짧은 수명으로 종간하고 말았다.

(2) 《중외일보》

《시대일보》가 발행을 중단하자 李相協이 《中外日報》라는 제호로 바꾸어 9월 18일 총독부로부터 새로운 신문의 발행 허가를 얻었다. 이상협은 《시대일보》의 인원과 시설을 인수하여 11월 15일 《중외일보》를 창간하였다. 편집 겸 발행인은 이상협, 인쇄인은 金正琪였다. 이상협은 신문 제작의 鬼才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기간에 편집과 경영 양면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언론계를 주름잡던 사람이었다.

《중외일보》는 “가장 값싸고 가장 좋은 신문”을 표방하였는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하루 6면 발행에 1개월 구독료가 1원이었던 데 비해 《중외일보》는 하루 4면 발행이었지만 1개월 구독료가 60전이었다. 이와 같은 염가 정책으로 먼저 창간된 《동아일보》·《조선일보》와의 차별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누적된 경영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1928년 12월 6일자 논설 〈職業化와 醜化〉로 인해서 발행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었다. 이 정간은 42일 만인 이듬해 1월 18일에 해제되었으나 2월 12일에야 속간되었다.

이상협은 《중외일보》의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을 시도하였으며 1929년 9월부터는 조석간 8면 발행을 단행하였다. 이에 자극을

는 이야기가 나온다.

23) 정진석, 앞의 책(2001b), 410~416쪽.

받아 《동아일보》·《조선일보》도 8면으로 맞서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원래 재력이 빈약한 《중외일보》로서는 스스로 시작한 이와 같은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수명을 단축하게 되어 1931년 6월 19일자로 종간호를 낸 후 더 이상 발행되지 못했다.

5) 일제의 언론탄압

(1) 행정처분

일제통치 기간 중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4회씩, 《중외일보》도 1회의 발행정지(정간) 처분을 받았는데 1925년 이전까지는 행정처분에만 그쳤으나, 그 이후부터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병행하는 2중의 탄압을 받았다.

총독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된 직후부터 압수와 정간의 탄압을 자행하였다. 언론탄압은 신문 또는 잡지를 발행하기 전 단계부터 실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통제를 가하는 ‘사전탄압’은 ① 간담, ② 주의, ③ 경고, ④금지의 4단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앞의 3단계는 법규에도 없는 것이었다. 다만 마지막 단계인 금지는 <신문지법>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광무 <신문지법>은 제11조에서 15조까지 보도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제교의를 저해하는 사항, 관청의 기밀 문서 등은 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금지’를 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규에 없는 간담·주의·경고도 실질적으로는 법에 의한 규제와 같은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제작된 신문에 대한 행정처분인 ‘사후탄압’은 4단계가 있었다. 가장 가벼운 ① 삭제로부터, ② 발매금지, ③ 압수, 그리고 ④ 발행정지(정간), ⑤ 발행금지(폐간)의 단계로 탄압의 강도가 높아진다.²⁴⁾ 총독부는 신문 검열을 위한 업무

24) 정진석 편,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모음》 I·II(LG상남언론재단, 1998), 6~20쪽.
——, <일제의 민족지 압수기사 연구>(《한국 근대언론과 민족운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158~209쪽.

내규로 ‘검열표준’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이 내규는 다시 ‘일반 검열’과 ‘특수 검열’로 대별하여, 일반 검열은 ‘안녕 질서 방해사항’과 ‘풍속 괴란의 사항’으로 나누어 모두 44개 항으로 세분되어 있었다.²⁵⁾ 총독부가 검열에서 압수한 기사를 분류한 <조선문 간행물 행정처분 例>라는 자료를 보면 행정처분을 내린 이유를 19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²⁶⁾

언론 검열의 법적인 근거는 악명 높은 광무 <신문지법>이었다. 이 법 제10조는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豫先 내부 및 그 관할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함이 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을 발행하기 전에 미리 관할관청에서 검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이와 함께 “신문지가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 하는 자로 認하는 시는 그 발매반포를 금지하여 此를 압수하며 또는 발행을 정지 혹 금지함을 득함(제21조)”이라 하여 신문과 잡지의 발매 금지·압수·정간에서 폐간에 이르는 탄압을 자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항이 들어 있었다. 설사 이같은 조항이 없었다하더라도 일제의 언론탄압에 민간지가 저항할 힘은 없었다.

신문·잡지·출판물의 허가과 통제를 담당한 부서는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였다. 도서과에는 검열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 기구인 檢閱係가 있었다. 경무국 도서과에서 4단계에 걸친 사전 통제를 가한 이유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 치안 방해, ② 수사상의 필요, ③ 풍속 괴란, ④ 군사 관계, ⑤ 기타 등이다.

《조선일보》는 창간 후 겨우 제4호를 발행했던 4월 28일자에 영친왕과 일본 왕족 方子の 강압적인 결혼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가 압수당한 것을 시초로 그 후로도 빈번한 압수와 삭제를 당하다가 마침내 1920년 8월 27일자 사설 <自然의 化>가 문제되어 민간신문발행 이후 최초로 총독부로부터 정간처분을 당했다. 문제가 된 논설은 미국 국회의원 시찰단 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기회를 타서 평양과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민심이 격

25) 朝鮮總督府 警務局圖書課, 《朝鮮出版警察概要》(1936년판), 76~80쪽.

朝鮮總督府 警務局圖書課, 《朝鮮出版警察概要》(1937년판), 80~84쪽.

朝鮮總督府 警務局圖書課, 《朝鮮出版警察概要》(1939년판), 69~74쪽.

26) 朝鮮總督府 警務局圖書課,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1930년판), 85~131쪽.
정진석 편, 앞의 책(1998), 33~75쪽.

양하여 경찰과 충돌한 사건을 다룬 내용이었다. 총독부는 이 사설을 문제삼아 발매금지 및 압수처분과 함께 <신문지법> 21조를 적용하여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1주일간 ‘유기한 발행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차 정간이 끝난 후 곧바로 2차 정간으로 이어지는 탄압을 당하였다. 1주일간의 정간이 해제된 지 3일째인 9월 5일, 지령 제116호에 실린 <우열한 총독부 당국자는 何故로 우리 일보를 정간식혔나뇨, 천하의 동정이 吾社에 폭주함>이라는 사설이 또다시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사설은 문화정치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있는 총독부가 《조선일보》에 탄압을 가함으로써 정책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통렬히 비난한 내용이었다. 총독부는 이에 대해 이 날짜로 즉시 ‘무기한 발행정지’(무기정간) 처분의 탄압을 가했다. 총독부는 정간 62일 만인 11월 5일에 발행정지 처분을 해제했으나, 잇따른 탄압과 창간 초부터 닦았던 경영난으로 즉시 속간을 못하고 정간 111일 만인 12월 24일에야 속간호를 내놓았다.

《동아일보》는 창간 2주일만인 4월 15일자에 실린 <평양에서의 만세소요>가 압수당한 것을 시초로 빈번한 압수 또는 삭제를 당하다가, 9월 24일과 25일자 연속 사설 <祭祀문제를 再論하노라>가 문제가 되어 제1차 정간처분을 당했다. 총독부는 이 사설이 일인들이 신념의 중추로 삼는 거울—구슬—칼의 이른바 3종의 神器를 모독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8월 30일부터 9월 25일까지 연재했던 <大英과 印度>라는 기사도 영국의 인도에 대한 악정을 논하면서 이를 조선과 대조하려 하였으며 그밖에 여러 기사가 총독정치를 불신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정간처분의 이유였다.

이 정간은 해를 넘겨 1921년 1월 10일에 해제가 되었으나 즉시 속간하지 못하고 40일 후인 2월 21일이 되어서야 다시 발행하기 시작했다. 정간 중에는 張德俊 기자가 일본군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무렵 간도 일대에서는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6월에 있었던 홍범도 부대의 봉오동 전투, 9월 김좌진 부대의 청산리전투 등에서 일본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히자, 일본군은 그 보복으로 10월부터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을 무차별로 학살하여 많은 피살자가 발생하였다. 이 때 장덕준 기자는 신문이 정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만주의 훈춘으로 달려가 현지에서 제1신을 보낸 후 일본

군에게 붙들려 간 후 소식이 두절되었다. 그는 한국 언론사상 최초의 순직자가 된 것이다.

(2) 사법처분

《조선일보》는 창간되던 해의 제1차와 2차 정간에 이어 1925년 이후에 2차례의 정간처분을 당했다. 1925년 9월 8일자 사설 〈조선과 露國과의 정치관계〉가 총독부의 조선통치에 대한 불평불만을 부채질했다는 이유로 총독부는 《조선일보》에 발행정지를 명하는 동시에 1만 4,000원을 들여 구입한지 한 달 밖에 안된 윤전기까지 차압했다. 총독부는 이 논설이 “극단적으로 조선통치에 대한 불평 불만을 시사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國體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실행수단으로서 러시아 혁명운동의 방법에 의해 현상을 타파할 것을 강조한 기사”였기 때문에 발행정지를 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편집겸 발행인 김동성, 인쇄인 김형원, 논설부장인 안재홍, 기자 김준연, 정리부장崔榮穆, 고문 이상협 등을 소환 심문하다가 논설집필자 신일용을 〈치안유지법〉, 김동성과 김형원은 〈신문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이때부터 총독부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병행하는 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재판결과 법원은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 김형원은 징역 3개월 그리고 문제된 사설을 인쇄한 윤전기는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26년 3월 《동아일보》는 두 번째 무기정간 처분을 당했다. 모스크바의 국제농민조합 본부가 3·1운동 기념일을 맞아 조선 농민들에게 보낸 전보문을 전제한 것이 정간의 이유였다. 정간과 함께 주필 宋鎮禹와 발행인 金鐵中이 구속되어 〈보안법〉과 〈신문지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8개월과 금고 4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정간은 44일 만인 4월 19일에 해제되어 21일부터 속간했다. 김철중은 2차 정간으로 인한 사법처분 사건이 계류중인 때에 또 다른 필화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번에는 1926년 8월 22일자 칼럼 〈형설수설〉이 문제가 되어 집필자 崔元淳은 〈보안법〉 위반, 편집 겸 발행인 김철중은 〈신문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9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원순은 징역 8개월, 김철중은 금고 6개월을 구형받았다. 최원순은 이해 6월 20일에 열린 공소 공판에서도 3개월을 인도받아 이튿날 불복 상고했으나

그 결말은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일보》의 제4차 정간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은 1928년 5월 9일자 사설이었다. 그러나 3개월 전인 1월 21일자 사설부터 말썽이 되어 발행인 겸 주필 안재홍과 편집인 백관수가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였다. 먼저 문제가 된 〈保釋 지연의 희생, 공산당 사건의 實例를 見하라〉는 1925년 12월에 있었던 신의주 공산당원의 대검거를 다룬 내용으로 일제의 감옥제도와 고문, 비인도적 처사를 비판한 논설이었다. 총독부는 이 사설이 게재된 신문을 압수하고 발행인 겸 주필 안재홍과 편집인 백관수를 1월 4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했다가 정식으로 기소했다. 4월 28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안재홍에게는 금고 4개월, 백관수에게는 벌금 1백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안재홍과 담당검사는 모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말이 나기도 전인 5월 9일, 《조선일보》는 또다시 제 4차 정간을 당했다. 문제가 된 사설도 안재홍이 집필한 것으로 〈濟南사건의 壁上觀〉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침략의 일환으로 일본군이 산동에 출병하는 것을 외국의 실례에 비겨 비난한 내용이었다. 총독부는 이 사설이 “국민으로 하여금 출병의 진의를 오해케 하고 국위를 중외에 훼손케 하려는 비국민적 집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독부가 정간명령을 내린 것은 이와 같은 논조 때문만은 아니었고 민족진영의 연합체인 신간회와 《조선일보》의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총독부는 《조선일보》에 네 번째로 정간을 명하면서 1월 21일자 사설로 재판에 계류중인 안재홍이 달아날 우려가 있다 하여 보석을 취소하고 5월 28일 다시 수감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일보》가 정간 중인 7월 26일, 고등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覆審법원의 판결대로 구속 중이던 안재홍은 금고 8개월(지법에서는 4개월)을 복역한 뒤 1929년 1월 26일에 출옥했다. 《조선일보》의 정간은 1928년 9월 19일, 133일 만에 해제되어 21일자부터 속간했다.

《동아일보》는 1930년 4월에 제3차 무기정간 처분을 당했다. 창간 10주년 특집으로 미국의 주간지 《The Nation》의 주필 빌라즈가 보내온 〈조선의 현상하에 貴報의 사명은 중대하다〉는 축사를 실었는데 그 내용이 안녕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이었다. 《동아일보》는 문제된 축사 내용 가운데 총독부 경

무국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삭제령을 명령한 부분을 없애지 않은 채 호외를 발행했기 때문에 총독부의 행정처분에 반항했다는 것이었다. 《동아일보》가 정간처분을 당한 여파로 《중외일보》까지 압수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중외일보》는 사설에서 2년이 못 되는 동안에 총독부가 3개 민간신문에 모두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문화정치를 내세우는 총독부의 주장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공박하였다가 이 사설마저 압수당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정간은 138일이 지난 뒤인 9월 1일에 해제되었다.

〈鄭晉錫〉

4. 1930년대의 언론

1) 논조의 위축과 사세의 신장

1930년대의 언론은 논조가 위축되다가 점차 친일적인 지면으로 바뀌었다. 1931년의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일본 군부의 파쇼통치로 일본 국내에서조차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소멸되게 만들었다. 언론이 국가적인 통제하에 놓인 상황에서 한국의 민간신문이 항일 논조를 지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기였다. 언론이 일본 군부 파쇼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주된 외적인 이유였지만, 국내에서도 일제의 오랜 식민지 통치의 결과로 민족 독립운동이 전반적으로 퇴조를 보이고 있었던 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항일논조가 둔화되는 대신, 신문이 상업화를 추구하면서 20년대까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지해 보려고 애썼던 민족주의적인 태도가 퇴색하였다. 그러나 경영상태는 2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전되었다. 민간 3대 신문이 상업지적인 경쟁을 벌이면서 수익증대를 위한 광고수주에 열을 올리고 월간 잡지를 새로 창간하는 등으로 사세를 확장한 결과였다.

《조선일보》는 창간 이래 1920년대에는 경영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30

년대 초 방응모가 신문을 인수한 뒤에는 경영이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1932년 6월 15일 曹晩植이 사장에 취임했는데 이때 方應謨·趙柄玉·朱耀翰 등이 입사하여 경영난 타개를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1933년 1월에 방응모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창립을 발기하고 3월 22일자로 경영권을 인수하여 이해 9월까지 50만 원의 주식회사 법인등기를 마침으로써 창간 이래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해소하고 안정된 재정적 기반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방응모는 1935년 1월 ‘살무손’ 비행기를 최초로 도입하여 취재와 신문 공수에 활용하고, 6월에는 태평로 사옥을 신축했다. 또한 호외를 자주 발행하자 다른 신문들도 이에 대응하여 민간지간의 속보경쟁이 치열해졌다.

《중외일보》가 경영난을 타개하지 못하고 폐간된 다음에 그 시설과 사원을 인수하여 1932년 11월 27일자로 창간된 신문이 《중앙일보》였다. 《중앙일보》는 《중외일보》의 지령을 계승하고 盧正一을 사장으로 “대중의 신문, 여론의 지침, 신속보도, 엄정중립”의 사시를 내걸고 출발했으나 역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채 불과 5개월 만인 이듬해 5월 5일 자진하여 휴간에 들어갔다가 10월 31일에 속간했다. 3개월 후인 1933년 2월 16일에는 呂運亨이 사장에 취임하여 3월 7일부터 제호를 《조선중앙일보》로 바꾸었다.

독립운동가로 사회적 명망이 높았던 여운형은 신문 경영의 수완을 발휘하여 신문의 사세를 키워나갔다. 6월 27일에는 자본금 30만 원의 주식회사로 만들고, 7월 1일부터 지면을 늘려 종래 4면이던 신문을 6면으로 발행하다가 7월 15일부터는 조석간 4면씩 하루 8면으로 늘렸다. 여운형이 경영을 맡은 이후로 차츰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갔지만 아직껏 수지를 맞출 형편은 되지 못했고, 재정난이 심화되자 전무 겸 편집국장이었던 윤희중이 私財 2만여 원을 들여와서 국면을 미봉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에 윤희중과 인척관계에 있던 東一銀行 전무 成樂憲을 끌어들여 1936년 2월 23일에는 자본금 20만 원을 증자하여 기존의 자본금 30만 원에 보태어 자본금의 총액이 50만 원으로 늘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방응모가 인수하면서 자본금 50만 원을 전액 불입하였고, 《동아일보》는 75만 원의 자본금이라 하였으나 실지 불입금은 45만 원이었으므로 《조선중앙》도 자본금이 《동아일보》·《조선일보》와 같은 규모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증자는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장기휴간인 때여서 신문 속간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었다. 자본의 구성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처럼 단순하지를 못하고 양대 세력이 주식을 배분한 형세였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따져 社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였던 것이다. 증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취체역 사장 여운형, 전무 취체역 윤희중, 고문 權東鎭·尹致昊, 편집국장 李寬求, 경리국장 金世鎬, 공무국장 洪惠裕, 정치부장 裴成龍, 사회부장 朴八陽, 지방부장 林元根, 학예부장 金復鎭으로 새로운 진용을 구성하였다. 7월 1일부터는 조간 4면, 석간 8면으로 하루 지면이 12면에 달하게 되었고 구독료도 월 1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사옥을 증축하고, 운전기를 늘리는 한편 비행기를 구입하는 등으로 사세 확장을 꾀했다. 구독자도 증가하여 1936년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정간되기 직전의 발행부수는 3만 2,782부까지 올라가 《동아일보》의 3만 1,666부보다 앞서게 되었다.¹⁾

2) 잡지 발행 경쟁과 일본제품 광고

다른 경쟁지에 비해서 경영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던 《동아일보》의 사세도 1930년대에는 더욱 신장되었다. 30년대 초반부터는 신문사들이 모두 잡지 발행에 열을 올렸는데 처음으로 잡지 발행을 시작한 신문은 《동아일보》였다. 만주사변 직후인 1931년 11월에 동아일보사에서는 《신동아》를 창간하여 일제치하의 대표적 월간 종합지로서 이른바 ‘신문잡지’의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어서 여성지 《신가정》(1933. 1)을 창간하여 성공을 거두면서 일간 신문사들의 잡지 발간을 자극하여 잡지계의 새로운 판도를 형성토록 만들었다. 이때부터 일간 신문들은 다투어 잡지를 발행하였다. 여운형은 1933년 2월 《조선중앙일보》 사장에 취임한 다음에 이 해 11월 월간 잡지 《중앙》을, 1935년 1월에는 《소년중앙》을 창간했다. 《중앙》은 모체인 《조선중앙일보》가 《동아일보》와 함께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말소하여 정간당했던 1936년 8월까지 35호를 발간하다가 폐간했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도

1) 朝鮮總督府 警務局圖書課, 《朝鮮出版警察概要》(1936년판), 27쪽.
정진석, 《한국언론사 연구》(일조각, 1983), 137쪽.

1934년 2월 《월간매신》을 창간했다. 이 잡지는 일반에 인기를 끌지 못하였기 때문에 1년 동안 발행된 뒤 1935년 2월 《매일신보》 본지를 조석간 10면으로 증면하면서 발행을 중단하였다.

《조선일보》는 잡지 발행이 약간 늦어서 1935년 11월에 종합 잡지 《조광》을 창간했다. 《조광》은 판형이 《신동아》에 비해 좀 작은 A5판이기는 했지만 창간호부터 4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분량으로 발행되어 B5판(4×6배판) 230여 페이지였던 《신동아》를 위협하려는 기세를 보였고, 이어서 1936년 4월에는 《여성》을 창간하여 《동아일보》의 《신동아》·《신가정》과 경쟁을 벌이는 한편 《소년》(1937. 4)·《유년》(1937. 9) 등의 어린이 잡지까지 발행하였다.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잡지들이 나타나면서 잡지의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경영면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전까지는 소규모의 독립된 잡지에서 흔히 있었던 缺刊 또는 합병호가 없어지고 정기적으로 날짜를 맞추어 발행된 것도 달라진 현상이었다. 이렇게 되자 독립된 잡지사가 발행하는 잡지의 입지는 매우 좁아졌다. 이전까지는 소자본으로 운영되던 개인 경영의 잡지 또는 단체가 발행하던 잡지들과는 달리 신문사가 발행하는 잡지들은 풍부한 인력과 취재망, 그리고 광고 선전력을 활용하여 잡지계의 판도를 신문사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민간지들이 20년대와 비교해서 경영면에서 수지를 맞추게 되면서 사세가 신장되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현상만은 아니었다.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식민지하의 조선에는 큰 광고주가 없었기 때문에 민족지를 자처하던 신문들도 1930년대에는 광고수입의 60% 이상을 일본의 광고에 의존하게 되었다.

개항 이후에 일본과 열강세력은 조선에서 여러 가지 이권을 탈취하는 한편으로 그들의 생산품을 가져다 팔기 위해 조선의 소비시장을 공략하였다. 그들은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충동하는 영업전략과 강력한 무기인 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영세한 자본에 수공업 수준의 산업체계, 그리고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였던 조선의 시장은 무방비 상태로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문들은 일본상품의 시장 침투를 위한 광고매체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민간신문들이 지면을 통해서만 물산장려운동을 펴면서도

일본상품의 판매를 조장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민족자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자가당착의 모순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광고는 신문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민간지와 《매일신보》가 다 같이 전체 수입의 30% 이상 또는 40%선까지를 광고료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²⁾ 신문의 경영을 위해서는 광고가 필요하였고, 조선에서는 큰 광고주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광고의 일본 대기업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경영주들은 일본 대기업의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東京)과 오사카(大阪)의 광고주들을 접대하고 이들을 조선으로 초청하여 금강산 구경을 시키는 등 적극적인 관촉 활동을 벌여야 했다. 그러다 보니 신문이 “地主와 商工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략하였다”는 비난까지 듣게 되었다.³⁾

3) 문자보급－농촌계몽운동

1930년대의 언론은 논조가 위축되었으나 민족 정신을 고양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였다. 일제의 탄압으로 언론이 활기를 잃어가던 1920년대 후반부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조직적인 문자보급운동과 농촌계몽운동을 벌여 문맹 타파와 국어 보급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일제가 일어를 ‘국어’라 하여 한국어 말살 정책을 썼으므로 두 민간지가 이에 대항하여 문자보급운동을 벌인 것이다.

문자보급운동은 3·1운동 이후 한때 고조되었던 민족운동이 침체되던 시기에 문화운동의 형태로 전개된 민족운동이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전국의 지사·지국을 통한 조직을 활용하고 방학 때에는 귀향하는 남녀 학생을 동원하여 이 운동을 대표적인 민족운동으로 확산시켰던 것이다.

양 신문사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에는 국내외적으로 긴장과 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1927년에 신간회가 창립되어 민족운동의 단일전선을 지향했으나 팔목할만한 활동을 벌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유럽에서는 독

2) 정진석, <광고 사회사> II-일제하의 광고(《광고연구》, 1991년 가을호), 331~382쪽.

3) 이갑기, <신문기업론>(《비판》, 1932년 9월호), 2~6쪽.

일 나치 세력의 약진으로(1930) 세계정세는 전쟁 발발의 긴장이 높아졌다. 미국은 대공황(1929)의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일본은 미국에 앞서 1927년 3월부터 공황이 몰아쳐서 일본 정부는 4월 25일에 지불유예령(모라토리엄)을 실시하여 조선의 재계에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어닥쳤다.⁴⁾ 제1·2차 조선공산당 사건(1925·1926), 광주학생운동(1929), 그리고 만주사변(1931) 등을 거치는 동안 일제의 탄압은 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일제의 가장 심각한 민족말살정책은 한국어에 대한 탄압이었다. 일어를 ‘국어’라 하여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를 강요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였다. 《조선일보》는 창간 직후인 1920년 5월 1일자에 〈교육용 일본어에 대하여〉라는 논설을 통해서 조선인에게 조선어를 학습시키지 않고 어린아이에게도 일본어를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정신이 파괴되고 일본의 단점만을 본받게 되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교육용 일본어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가 총독부의 압수처분을 받았다.⁵⁾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조직적인 문자보급운동을 펼친 것은 이같은 시대상황이 배경이었다.

문자보급운동이 본격화했던 1930년 무렵의 조선인구는 2,000만 명이 약간 넘었는데 이 가운데 1천 700만 명 가량이 문맹이었다.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지 않은 학령미달 어린이를 약 200만 명으로 잡고, 늙거나 중년 이상 부녀자로서 문자를 깨우치기 불가능한 사람을 100만 명으로 추산하면 1,40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문맹이었다. 이를 통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⁶⁾

이 표를 보더라도 245만 명의 학령 아동 가운데 20%도 못되는 아이들만 보통학교(오늘의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80%가 넘는 어린이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서당의 총수는 1만 1,469개소였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이 16만 2,247명이었으므로 이를 합쳐보아도 교육을 받는 어린이는 74만 630명에 지나지 않았다.⁷⁾ 이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학교를 신

4) 《동아일보》, 1927년 4월 23일, 〈일본 재계 혼란으로 조선 상계에 대공황〉.
《중외일보》, 1927년 4월 24일, 〈재계 혼란과 錢慌〉
정진석 편,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모음》 I·II(LG상남언론재단, 1998), 435~436쪽.

5) 정진석 편, 위의 책, 704~705쪽.

6) 안재홍, 〈1천 4백만 문맹과 대중문화운동〉(《삼천리》, 1931년 9월호), 3쪽.

설한다 할지라도 매년 늘어나는 학령아동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학령 아동과 성인을 위해 신문사에서 벌인 문맹퇴치운동은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과제였다.

《조선일보》는 1929년부터 문자보급운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1> 1930년대의 취학률

조선인구수	20,437,219명
보통학교수	1,710교
보교생도수	487,878명
학령아동수	2,450,000명
100명당취학율	19.9%

<표 2> 조선일보 문자보급운동의 성과

연도	참가교	학생수	수강인원	비 고
1929		409명	2,849명	참가학생 409명 중 91명의 보고서만 집계한 수강자임
1930	46교	900명	10,567명	<한글원본> 9만 부 배포
1931		1,800명	20,800명	<한글원본> 20만 부, 추가 10만 부 배포(계 30만 부)
1934	124교	5,078명		집계된 수강인원 미상
1935				<한글원본> 10만 부 배포
1936				<한글원본> 50만 부 배포

* 1932·1933년은 문자보급운동 중단.

《동아일보》는 1928년 4월1일을 기해 ‘글장님 없애기 운동’을 벌일 것을 선언하였으나 총독부의 방해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1931년에서 1934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학생 하기 ‘브·나로드(V. Narod)운동’을 전개하여 문맹타파와 한글보급운동을 벌였다. 브·나로드운동이란 19세기 러시아의 지식층이 농민 속으로 파고들어 농민들을 상대로 벌인 계몽운동으로 러시아어로 ‘농민 속으로’라는 뜻이다. 브·나로드운동은 한글강습 외에도 위생강연·학술강연 등 광범한 계몽운동이었으나 주축은 역시 문맹타파였다. 《동아일

보》는 제4회가 되는 1934년부터는 브·나로드운동의 명칭을 ‘계몽운동대’로 개칭하였다. 《동아일보》가 벌인 브·나로드운동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동아일보 브·나로드운동의 성과

연도별	1회(1931)	2회(1932)	3회(1933)	4회(1934)	합 계
운동기간	62일간 (7. 21~9. 20)	82일간 (7. 11~9. 30)	81일간 (7. 12~9. 30)	73일간 (7. 2~9. 12)	298일
개 강 총일수	2,289일	8,182일	6,304일	3,962일	20,737명
계 몽 대원수	423명	2,724명	1,506명	1,098명	5,751명
강습지	142곳	592곳	315곳	271곳(만주29, 일본7 포함)	1,320곳
수강생 총인원	9,492명	41,153명	27,352명	20,601명	97,598명
교 재 배부수	30만 부	60만 부	60만 부	60만 부	210만 부
금 지	11곳	69곳	67곳	33곳	180곳
중 지	—	10곳	17곳	26곳	53곳

그러나 총독부는 두 신문사의 문자보급운동을 처음부터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동아일보》의 경우는 1931년 첫 해에 142곳에서 강습회를 열었는데, 그 중 11곳에서 금지당했다.⁸⁾ 이듬해 제2회 운동이 시작될 때인 5월 17일에는 〈학교와 학생에 고함〉이라는 사설을 실었으나 총독부는 이 사설의 후반부 일부를 삭제하였다. 지방에 따라서는 집회허가를 제때에 내주지 않거나 이를 금지 또는 중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⁹⁾

8) 《동아일보》, 1931년 10월 21일, 〈금년 하기 이용 제1회 브나로드운동 총결산〉.

9) 《동아일보》, 1932년 10월 6일, 사설 〈제2회 브나로드운동의 성과〉.

마침내 1935년 여름방학부터는 《동아일보》·《조선일보》양 신문사가 문자보급운동을 동시에 중단하였다. 이때부터 총독부의 압력으로 학생을 동원하는 계몽운동은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935년 12월에 교재 10만 부를 인쇄하여 각지에 배포하였고, 1936년 12월에는 50만 부를 배포하였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몽운동을 벌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교재를 배포하고 겨울방학에 귀향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 운동을 계속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 운동이 시작되던 때에는 일제의 언론 탄압은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던 시기였다. 학생들과 지식인들 사이에는 좌절감이 팽배하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두 신문사는 문자보급운동이라는 민족적 대사업을 기획하여 해마다 신문의 발행부수보다 훨씬 많은 문자보급 교재를 만들어 무료로 전국에 배포하고 한글을 깨우치도록 했다는 사실은 세계 언론사에서도 희귀한 일이다.

신문사의 문자보급, 농촌계몽 그리고 민족정신 함양의 노력을 반영한 문학 작품들이 신문에 많이 실리게 되었다. 이광수의 《이순신》(1931. 6.~1932. 4.)은 민족정신을 고양한 작품으로 《동아일보》의 현충사 증간에 맞추어 연재되었다. 심훈의 《상록수》(1935. 9. 10.~1935. 2. 15. 연재)는 동아일보사가 창간 15주년을 기념하여 공모한 가운데 당선된 장편소설인데 문자보급운동이 소재가 된 소설이다.

4) 3대 민간지의 폐간

1920년대 후반부터는 언론의 논조가 점차로 위축되어 기사의 압수, 삭제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1930년대에는 신문경영자들이 수지타산을 가장 우선적인 경영방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도 1936년 8월에 일어난 ‘일장기 말소사건’은 탄압속에서도 언론의 항일정신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민간 3대지 가운데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가 동시에 무기정간을 당한 끝에 《동아일보》만이 이듬해 6월 1일에야 정간이 해제되어 이튿날부터 복간하였으나, 《조선중앙일보》는 영영 문을 닫아야 할 운명에 처했으며 《신동아》·《신가정》·《중앙》 등 두

신문사가 발행하던 잡지는 모두 폐간되었다.

이 사건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 우승을 차지한 孫基禎 선수의 사진을 실으면서 그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말소하였다가 일어난 필화였다. 《동아일보》는 8월 25일자 지상에 손기정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의 유니폼의 가슴에 붙어있던 일장기 마크를 말살하였다. 이 사진은 8월 23일자 《오사카 아사히신문》에서 제공받은 것인데 고의로 이를 말살한 사실이 발각되었던 것이다.¹⁰⁾ 총독부 경무국은 《동아일보》 사회부장 玄鎮健을 비롯하여 여러 관련자를 연행하고 8월 29일자로 무기정간 처분을 내렸다. 손기정의 사진을 실으면서 역시 일장기를 말소했던 《신동아》 9월호에 대해서도 일제는 정간 처분을 내리고 신동아 편집부장 崔承萬을 구속하였다.

총독부는 《동아일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었다. 《조선중앙일보》도 8월 13일자 제3036호 조간 3면에 일장기를 지운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실었음을 알아낸 것이다.¹¹⁾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279일이라는 최장기의 정간 끝에 이듬해 6월 1일 복간되었으나, 재정적 기반이 빈약했던 《조선중앙일보》는 끝내 복간하지 못한 채 1937년 11월 5일 로써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간되고 말았다.

일제의 탄압과 한국어 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940년까지 발행을 계속하였으나 마침내 한국어 민간신문은 더 이상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일제가 한국어 말살정책으로 한국어로 발행되는 신문을 없애려 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전시체제하에서의 물자 부족으로 일본 전역에 걸쳐서 신문사를 정비한다는 정책 때문이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38년 가을부터 보도의 통일과 아울러 자원고갈을 방지한다는 목적 아래 각 縣별로 통합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신문 정비의 원칙으로 인구 10만 명의 도시에 하나의 신문만 남긴다는 목표를 세우고 1縣 1紙의 원칙 아래 통합을 강력히 추진하였다.¹²⁾ 조선에서는 1道 1紙의 원칙이

10) 朝鮮總督府 警務局圖書課, 앞의 책(1937년판), 123쪽.

11) 朝鮮總督府 警務局圖書課, 위의 책(1936년판), 119~120쪽.

朝鮮總督府 警務局圖書課, 위의 책(1937년판), 130쪽.

12) 〈新聞整備 進歩〉(《日本新聞年鑑》, 日本新聞研究所, 1940년판), 550쪽.

적용되었다. 이 원칙은 일본인 발행의 일본어 신문에도 적용되었으므로 1940년 1월에 평양에서 발행되던 《西鮮日報》를 폐간하고 《平壤毎日新報》에 통합시킨 것을 시발로 하여 11월에는 《北鮮日日新聞》과 《北鮮日報》를 통합하여 《淸津日報》를 창간하였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의 일본어 신문을 통폐합시켰다.¹³⁾

한국어 신문에 대해서도 총독부는 《매일신보》 하나만을 남긴다는 방침 아래 1940년 1월부터 끈질기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폐간을 강요하였다.¹⁴⁾ 두 신문은 총독부의 압력을 이길 수 없어 이 해 8월 10일 동시에 폐간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일본이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1920년부터 발행되었던 민간신문은 명맥이 끊어지고 이로부터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의 5년간 또다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독무대가 되었다. 《매일신보》는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발행되다가, 11월 22일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었다.

〈鄭晉錫〉

13) 〈全國新聞の整理經過〉(《新聞總覽》, 日本電報通信社, 1942년판), 19~29쪽.

14)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역사비평사, 2001), 453·455·459쪽.